

KMI 동향분석

VOL.56

2017 NOVEMBER

발간년월 2017년 11월(통권 제56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정책동향연구본부 동향분석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김민수 동향분석실 전문연구원
(guan72@kmi.re.kr/051-797-4787)

김연수 동향분석실 연구원
(ykim@kmi.re.kr/051-797-4789)

이주호 동향분석실 실장
(jooho@kmi.re.kr/051-797-4671)

최지연 해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jychoi@kmi.re.kr/051-797-4713)

남정호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위원
(jhnam@kmi.re.kr/051-797-4712)

박동현 정책동향연구본부 인턴연구원
(david7905@kmi.re.kr/051-797-4918)

지난 9월 지역 해양수산 산업의 전략적 발전 방안과 실천 과제 모색을 위해 ‘해양수산 전국포럼’이 출범했다. 포럼은 지역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해양수산부, 대학, 지자체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산·관·학·연·정 해양수산 지역 협의체로 해양수산 부문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축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포럼은 시도 연구원과 함께 내년 말까지 전국 13개 도시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강원 지역세미나(9/27)에 이어 지난 11월 6일 충남연구원에서 두 번째 지역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주제인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지역발전전략’과 관련해 최지연 KMI 연구위원은 국가경제의 핵심공간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연안·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6+1 연안·해양 권역 지역균형발전 구상(안)’을 제시했다. 3대 추진과제로는 ‘연안·해양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 ‘중앙·지역 소통 및 협업체계 마련’, ‘연안·해양 지역성장 지원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제2주제인 ‘해양공간계획과 해양환경보전’을 발표한 남정호 KMI 연구위원은 해양공간계획체계 구축과 해양생태계서비스가 현재 국제사회의 큰 흐름이며, 해양국부(Ocean Well-being)의 지속가능한 창출을 위한 신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충남지역은 현재 해양생태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 혁신 주도, 거버넌스 기반 정책결정 과정 확산,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레질리언스 형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제3주제 발제자로 나선 정옥식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충남 갯벌이 가지고 있는 자원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충남 서천 갯벌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선정한 11개 핵심 철새서식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8대 생태관광지에 해당하지만,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갯벌 생산성 저하 등으로 철새 개체수가 급감했다고 보았다. 향후 갯벌의 자원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갯벌복원과 생태관광을 통한 수익창출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4주제를 발제한 김진영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충남이 현재 해양수산 인프라 확충, 연구역량 강화 및 해양수산 신사업 개발 등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환경 보전 및 생태관광 기반 구축, 수산업 미래산업화,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항만 배후지 개발 통한 물류 산업 활성화 도모 등을 충남이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으로 꼽았다. 나아가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연구·교육 인프라 구축,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및 한국 어촌민속마을 조성, 해양라이프케어 복합단지 조성 등을 신정부의 지역공약과의 연계 추진 과제로 제안했다.

제2부에서는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의 진행으로 총8명의 산·학·연·정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안완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은 서산 대산항이 다양한 인프라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했다고 보고,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개발하여 해양주권 강화, 수산자원 보호, 생태관광 거점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윤준상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학장은 충남 지역 기반 해양수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세계적 김 클러스터 구축, 휴양과 치유 기능을 가진 어촌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충남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센터장은 해양바이오를 소재로 한 충남 지역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관련 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원 충청투데이 충남본부장은 연안지역 항만 배후시설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해양수산 관련 R&D 기관을 충남에 유치하고, 고유한 지역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영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안과 육역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으며, 통합관리 관점에서 정부 부처 간, 국책연구기관 간 협력이 더욱 필요해 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연계·통합의 핵심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며, 충남 지역 해양수산 연구 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며, 충남 연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해양수산 분야 지역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문승국 태안남부수협 조합장은 1차 산업인 수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고민이 필요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는 수협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의 공동주최기관인 충남연구원의 강현수 원장은 충남 지역 해양수산의 현안이 유관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며, 국책연구기관과 지방연구원 간 지속적인 연구과제 발굴 및 공동 수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의 발제와 토론에서 충남 연안지역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과제발굴에 중점을 두되, 특히 자치분권을 활용해 연안지역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연구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점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 해양수산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 리더십을 통해 도출된 지역 해양수산 계획과 국가 계획간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연구기관, 지역 산·학·연·정 간 공론의 장이자 해양수산인의 컨센서스 도출을 위한 협의의 장인 ‘해양수산 전국포럼’의 역할이 기대된다. **둘째**, 충남 지역이 가진 갯벌·연안·해양수산 자원 잠재력을 잘 활용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수성과 장점이 반영된 정책 수립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기반의 해양수산 R&D 기반 및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환황해 연계 해양수산 신사업, 즉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격렬비 열도를 잇는 섬 크루즈 벨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통한 생태기반 해양관광벨트, 태안군 안면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힐링벨트, 천수만 요트클러스터 등 충남 지역 특화 해양신사업을 추진하고, 세계적 김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명품 김’ 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갯벌 복원과 보전을 통해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아가 이를 생태관광으로의 현명한 이용과 연계시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생태자본을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해양수산 자원의 재생력(레질리언스)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세션 I.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지역발전 전략

발표 1.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연안·해양 지역 균형 발전 체계

최지연 KMI 해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연안·해양지역은 국가경제의 핵심공간으로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가는 교두보

■ 연안·해양지역은 항만 등 물류거점공간, 수산 등 인류식량공급처, 해변·해양레포츠 등 해양관광휴양지, 산업단지기업 등 일자리 창출 공간 등 국민경제의 핵심공간으로 활용

- 우리나라 연안·해양지역은 압축적 고도성장을 견인한 국민경제의 핵심공간으로, 세계도시인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도 연안·해양을 통해 크게 성장함
- 우리나라의 연안·해양지역은 수출입물량의 99%를 담당하고, 연간 1억여명이 해수욕장¹⁾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산물 등 식량의 핵심공급처²⁾이면서 산업단지 449개소(전국의 39.9%) 등이 입지해 있는 등 국가경제의 핵심공간으로 연안·해양지역의 질적 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가는 교두보로 활용해야 함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는 해양수산업의 고도화·다변화와 연안·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해 지역 신성장동력을 마련 중

1) 2015년 기준,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 해양수산부는 FAO의 '2016 세계수산양식현황' 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 수산물섭취량은 연간 58kg로 세계 1위(노르웨이 2위(53.3kg), 일본 3위(50.2kg))로 발표(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7. 2. 13)

■ 최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안·해양을 기반으로 한 항만, 수산, 해양관광, 재해안전, 해양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수요가 크게 증가

-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역활력 저하, 기업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안·해양을 대상으로 항만재생·재활성화,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 바다목장사업, 해양치유관광, 노후·유휴산업단지와 조선소 등 산업유물의 재활용, 갯벌·모래해안 등 생태환경복원과 해양과학기술 기반의 재해안전 대응책 강화 등 융·복합형 해양수산 산업의 고도화와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지역에서 추진 중인 많은 해양수산 관련 정책·사업은 연안·해양지역별 해양수산업의 특화도·다양성과 사회경제적 기반의 차이 등을 고려해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부문별 기능분리적 접근과 획일화된 사업내용으로 연안·해양지역 성장시너지를 제고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함
- 따라서 지역 고유의 연안·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특화도와 다양도, 연안·해양지역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종합적 연안·해양지역성장체계를 마련해 국가와 지역 해양 잠재력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1 연안·해양권역 지역균형발전 구상(안) 제안을 통한 연안·해양지역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방안 모색 필요

■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안·해양지역의 가치와 발전역량 등을 응집한 ‘6+1 연안·해양권역 지역균형발전구상(안)’ 검토 필요

- ‘6+1 연안·해양권역 지역균형발전 구상(안)’은 연안·해양지역별 발전혁신역량증진과 해양수산업 고도화와 지역 비즈니스 연계, 지역 연안·해양자원의 지속가능이용,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조성과 복지 실현, 친수문화와 생태환경 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임
- 전국 연안·해양지역의 발전역량, 지역 일자리와 경제산업구조, 주거안전, 복지, 친수문화, 해양환경 가치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연계 패키지 지원 등을 위해 6+1 연안·해양권역 설정과 지역 균형발전방향 제시가 필요함
 - ※ 6개 권역: 공존경제해역권(인천·경기), 환황해연계해역권(충남·전북), 삼新경제해역권(전남·경남), 청정·평화해역권(제주), 동북아거점해역권(부산·울산), 심해·북방해역권(강원·경북)
 - ※ +1권역: 내륙해양영토권(육상 내수면)

■ ‘6+1 연안·해양권역 지역균형발전구상(안)’의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안·해양지역 맞춤형 균형발전방안’, ‘중앙·지역 소통 및 협업체계’, ‘연안·해양 지역성장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안

- ‘연안·해양지역 맞춤형 균형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항만·산업도시, 수산·관광기반 중소지역, 어촌·섬 등 연안·해양지역과 배후지역과 연계한 해양수산 부문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고, 항만·어항 등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성장지구 등 거점개발과 낙후·노후지역의 연안·해양형 도시·지역재생 추진 등을 위한 다층적 연안·해양지역성장 전략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부문 국가정책과 지역정책 연계와 일자리·지역별 특화산업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중앙·지역 소통 및 협업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관련 지역현안 발굴과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이행 및 효과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과 지역의 상시적 소통과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해양수산 지역발전지원센터(가칭)’을 설치해 지역주도사업의 국가정책화 추진 및 지역의 융·복합 협력사업의 지속적·일관적 추진을 지원해야 할 것임
- ‘연안·해양 지역성장 지원체계’를 위해서는 연안·해양권역별 종합발전계획체제인 ‘전국 연안·해양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해 체계적 지역정책·사업 추진과 연안·해양지역발전성과 관리 등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추진 중인 지역발전체계와 연계한 연안·해양지역 지역발전 체제가 필요함

발표 2. 해양공간계획과 해양환경보전

남정호 KMI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위원

해양공간계획체제구축과 해양생태계서비스는 국제사회 큰 흐름

■ 연안해양공간은 사회경제적, 생태적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회경제 생태 리스크는 크게 증가

- 인구 천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메카시티(mega city)의 2/3는 연안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약 60%가 해안선에서 10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 해양생태계는 전 지구 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68%를 책임지고 있어 해양공간과 생태계의 체계적 관리는 인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반면 육상중심의 이용개발로 인해 오염물질의 약 77%가 육상에서 흘러들어가 적조, 산소고갈 상태인 데드존(dead zone) 등의 문제가 발생됨
- 해양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연안지역은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여, 사회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축과 해양생태계서비스에 관한 국제사회의 정책변화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

-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에서 “해양생태계와 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이 목표 14로 설정된 것은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 유네스코 주도로 추진 중인 해양공간계획 체제를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데, 이들 해양공간계획은 갈등조정, 통합관리, 해양보전, 경제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함
- 2030년에 이르면 해양공간계획을 통해 세계 해양의 1/3이 관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해양공간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는 국제사회의 레짐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유엔환경계획(UNEP) 등이 주관하는 IPBES(생물다양성과과학기구)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보전을 위한 평가와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임

해양국부(Ocean Well-being)의 지속가능한 창출을 위한 新정책 프레임워크 필요

■ 선 계획 후 이용 원칙 정착, 해양공간정보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형성

- 해양수산부 내, 타부처의 이용개발에 대한 공간입지적합성, 환경 및 사회적 갈등영향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공간계획을 총괄할 전담부서인 해양계획국(가칭)과 해양공간계획관리원(가칭)을 조기 설치할 필요 있음
- 연안정비사업을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 연안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6개의 유형(고밀도 구도심, 중소도시, 저밀도 어촌, 연안육지부, 육지부-도서연계, 유무인도 연계)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해양공간계획체제 시행의 전제조건인 관할해역 전체에 대한 해양공간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통해 해양에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 추진 및 해양공간정보서비스 기업 육성 필요함

■ No-take 보호구역 지정 등 해양생태자본 확충을 위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체제 고도화

- 해양보호구역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No-take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보호구역 지정 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을 연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행 필요함
- 갯벌중심의 해양생태계 복원정책을 염생식물 군락, 사구, 해조류지대, 산호, 방조제 구조변경, 하구역 생태복원, 인공해안의 자연해안으로 복원 등으로 확대해야 함
- 매립토지 사유화 금지, 자연해안 및 서식지의 총량관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현실화 등을 통해 공유재인 해양공간 및 생태계 관리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함

■ 과학적 해양환경관리, 어장환경관리와 연계, 오염원통합관리 강화

- 해양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육상기인, 해양기인 오염원의 과학적 진단과 적극적 통제를 전 해역으로 확대하고 해역별 관리목표를 환경적 목표와 사회경제적 이용목표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함
- 성공적 해양환경관리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특별관리해역에서 환경보전해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확대·적용하고 관리항목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에서 중금속, 유해화학물질로 확대해야 함
- 양식장 기인 오염원관리를 해양환경관리체제에 통합하기 위해 환경상태 조사 및 진단체계를 통합하고, 어장환경관리기준을 해양환경관련 법체제로 수용해야 함

■ 위기관리, 생태적·사회경제적 해양재생을 위한 신 사회협약 체결로 ‘해양거버넌스 (Ocean Governance)’ 강화

- 해양생태계 위협요소 제거, 자연재해 취약지역 관리 고도화, 유해물질 및 환경사고, 원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육상중심, 이용개발 중심, 도시중심, 어민중심의 구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유재로서 해양관리, 해양가치에 기반한 현명한 이용을 위해 신 사회협약을 체결. 신 사회협약은 중앙부처, 지방정부, 지역주민, 일반시민, 전문가 등이 책임과 권한, 의무에 기초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포괄적 협력의 기반으로 기능할 것임
- 고밀도 육상중심, 외부자본 의존형 연안개발, 도시재생체제를 해양가치 창출과 지역중심의 발전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자본(인적, 생태, 물적, 사회)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는 “느리지만 지역중심의 강한 변화”를 추구할 필요 있음
- 해양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자료·정보의 질과 양에 따라 좌우되는데, 해양수산 연구개발에서 양적성장 외에도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추구하는 ‘연구’와 이를 활용하는 ‘개발’ 간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법정해양조사,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자료와 정보는 생산과 동시에 민간에 개방하여 사회경제적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는 구축 중

■ 해양생태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 혁신을 주도

- 충남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연안해양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훼손된 해양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음
- 특히 해양생태계 훼손과 어업생산력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원인인 하구지역의 방조제를 복원하여 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우선적으로 방조제가 본래의 건설목적에 맞게 운용되지 못하고, 복원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보령댐 복원을 시범사업으로 제안하였음
- 국가 갯벌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고파도 폐염전 및 유부도의 폐염전 복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토대인 거버넌스에 기반한 정책결정 과정 확산

- 충청남도의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현안인 금강하구 생태계 건강성 증진, 가로림만 지속가능한 발전, 천수만 고수온 피해방지 등에 대해 주민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같은 거버넌스 구조를 활용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함
- 이는 정책결정의 사회적, 정치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정책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임
- 행정기관-지역주민-이해당사자간 정책형성 및 시행과정에서 구축된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바, 동일한 조건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자본이 확충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정책성공가능성은 큰 차이가 있음

■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한 레질리언스 형성

- 2013년, 2016년 천수만 해역의 고수온에 따른 어업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역어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인식하였음
- 회피할 수 없는 자연환경의 변화인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한 대안을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제시하였음
- 특히 대안별 시행가능성과 타당성, 잠재적 원인행위에 대한 인과관계의 과학적 규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였음

세션 II. 충청남도 해양수산 주요과제 및 현안

발표 3. 서해안 갯벌의 중요성 및 역할

정옥식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서해 갯벌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서식지

■ 서해안은 우리나라 도요물떼새의 주요 서식지

- 철새 개체수는 계절별로 상이하나 서해안 전역에서 약 60여 종의 도요물떼새가 관찰됨
- 2014년 5월 기준으로 장항해안에서 28종 약 13,500여 마리, 유부도에서 44종 9,500여 마리, 금강하구에서 26종 약 7,000여 마리의 도요물떼새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타 지역의 경우 간척사업 등으로 철새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표1. 국내 주요 도요물떼새 서식지별 도래 종수 및 개체수(2014)

구분	4월	5월	8월	9월	10월
강화도	38/4,524	41/5,056	43/9,580	44/4,305	58/4,911
남양만	49/26,516	36/2,543	28/5,452	34/12,815	52/19,287
아산만	33/1,330	27/1,681	24/4,702	24/2,522	33/8,698
장항해안	26/18,482	28/13,540	28/11,530	16/7,190	18/4,165
유부도	39/46,581	44/9,461	35/24,185	32/13,343	48/17,193
금강하구	21/3,829	26/7,032	14/1,346	21/2,824	24/9,230
만경강	42/8,614	26/13,578	35/2,181	43/13,663	38/27,468
동진강	30/3,535	27/8,516	24/1,349	32/3,684	34/18,780

자료: 국립생물자원관, 철새 이동경로 및 도래실태 연구, 2014

■ 국제적으로도 철새 서식지로서의 보존가치 인정

- 개체별로 전 세계 개체수의 1% 이상이 서식·도래하는 경우 국제 주요 서식지(습지)로 인정됨

- 한 개체만 서식해도 람사르 협약 상 보호구역이나, 서해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10여 종 이상의 철새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됨
-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서해안을 철새의 핵심 서식지로 지정하고, 특히 강화도와 서천 갯벌은 중요 서식지 11곳에 해당함

서해안 도요물떼새 개체수 급격히 감소 추세

■ 서해안은 국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이동경로 상 서식지

- 서해안을 이동하는 도요물떼새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이동경로로 여겨지고 있음
- 최근 연구에서는 EAAF 경로를 이용하는 전체 개체수의 30%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부 종의 경우 70% 이상의 감소도 보임), 이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분석됨

■ 퇴적환경 변화, 서식지 감소, 갯벌 생산성 저하가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

- 유부도의 퇴적상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사질이 우세한 반면, 2000년대에는 니질이 우세하며, 이로 인해 저서 생물상인 이매패류가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발생함
- 조수 변화에 따라 서식지가 감소하면서 먹이공간 및 휴식공간이 감소한 것도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중간기착지에서 에너지를 확보해야하는 철새들이 휴식공간 부재로 1주일 이상 비행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번식지로 이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하구둑 개발 문제로 갯벌 생산성 자체가 감소한 것도 철새 개체수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됨

■ 국제적 멸종위기종 도래 지역으로 중요성 부각

- 서해안은 극심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200쌍) 및 청다리도요사촌(2,000마리)의 중간기착지로 보고되고 있음
- 또한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는 붉은어깨도요, 알락꼬리마도요, 큰뒷부리도요가 가장 많이 도래하는 지역으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서해 갯벌 보전 대책 마련 필요

■ 갯벌의 자원적 가치 인식 증진 필요

- 갯벌이 농경지 혹은 양어장으로 변할 경우 1ha 당 8,250달러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호주 모턴만, 와덴해 3국 등은 갯벌의 자원적 가치를 인식해 보전사업을 추진 중임
- 우리나라도 갯벌의 자원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함

■ 보전을 통한 수익창출과 공유 필요

- 생태 보전을 통한 해양생태관광 운영 시, 보전에 따른 예산 증가의 직접적 이익 이외에도 고용 촉진과 관광 수익 증대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향상에 따른 지역사회 안정화가 기대되며, 간접적으로 일반 관광 및 인구 유입의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을 기대되는 만큼 보전을 통한 수익창출과 공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생물 서식 공간 및 현명한 이용 공간 조성

- 생태관광을 위한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출입 제한 공간(보전공간)과 소극적 이용 공간(관찰공간), 그리고 활동 공간(이용공간)을 분리해야 함
- 이를 통해 생물의 서식 공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이 관찰 및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현명한 이용 공간을 조성해야 함

발표 4. 충청남도 해양수산 현안 및 주요 사업

김진영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충남이 안고 있는 숙제는 해양수산 인프라 확충, 연구역량 강화 및 신산업 개발

■ 낮은 생산성 및 전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충남 수산업이 직면한 문제점

- 충남의 어업가구(14.9%), 어업인구(14.1%), 어업생산량(8.8%)은 모두 전국 3위 수준으로 타 사도에 비해 우수한 편인 반면 어업생산량은 5위, 수산가공품 생산량은 7위에 머물
- 낮은 수산업 생산성과 높은 1차 산업 집중도가 충남 수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산업 기반 확충이 필요함

■ 풍요로운 자원에 비해 해양관광 기반시설 및 연계관광 기회 부족

- 1,242km에 이르는 리아스식 해안과 357km²에 달하는 세계 5대 갯벌, 268개의 유무인도서 등 다양하고 잘 보존된 해양생태 자원에 비해 해양관광 인프라는 부족한 편임
- 풍요로운 갯벌, 국제적인 철새도래지 위상에 불구, 해양관광 인프라는 일부 해수욕장과 어촌체험 마을에 한정되어 있으며, 해수욕이 연계 관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 취약한 항만물류 여건은 충남 물류산업 성장의 걸림돌

- 충남은 국가관리 무역항 3개, 지방관리 무역항 2개, 지방관리 연안항 2개 등 7개의 지정항만을 두고 있으나, 주로 자원·원료 수송 등 특정 목적이 활용되어 컨테이너 처리량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항만 배후단지와 마arina 항만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 연구역량 부족과 맹아기인 해양신산업은 충남 미래수산산업 발전의 한계

- 미래 해양수산 산업을 선도할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부족으로 산·학·연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헬스케어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등 해양신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함

충남의 중점사업은 해양환경 보존, 수산업 미래산업화,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구축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

■ 해양 환경 보존 및 생태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필요

- 천수만 내 고수온, 빈산소 수괴 발생 등으로 천수만 오염퇴적물 수거사업 계획을 수립 중임
- 태안군 근소만 일대에서 보호종 바닷새 5종이 발견되는 등 서해안은 해양자원 보존가치가 높은 만큼 향후 어족자원 보호와 어촌관광 활성화,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함

■ 수산의 미래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품목별 사업 추진

- '명품 김' 산업화를 위해 종묘개발부터 수출거점단지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김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임
- 해삼전용 연안바다목장 조성, 해삼 가공유통판매 특화단지 조성, 간척지를 활용한 대단위 양식 단지 조성 등 해삼산업 복합단지 구축을 위한 계획도 중요함
- 서해안 말백합 생산어장 복원 사업을 통해 자원량이 급감한 말백합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함

■ 해양문화예술 중심 관광산업 발굴, 태안 복합관광당지 조성, 복합 마리나항만 개발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 단순 개발중심 전략에서 탈피, 해양문화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테마형 해수욕장 발굴, 4계절 관광 자원화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함
- 중국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태안에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여, 신진도·마도 일원에 다양한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해양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한다면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당진시 왜목 마리나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마리나 루트를 개발, 도내 마리나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충남 레포츠 드림라인을 구축한다면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물류 및 관광 산업 활성화 도모

-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물류량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비인항 친수공간 등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모색함
- 수도권, 중부내륙권 및 중국과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안흥 지역을 해양레저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안흥 마리나 조성사업 추진이 필요함

충남지역 해양수산 핵심과제 및 현안

■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연구교육 인프라 구축

-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국립해양수산대학 유치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서해안권역 연구공백 해소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유치 활동을 강화해야 함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2020년 개교 예정),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2018년 6월 완공 예정) 등과 연계해 해양바이오산업 지원센터 구축이 가능함

■ 국가 해양 정원 및 한국 어촌민속마을 조성

- 가로림만은 국내최대 해양보호구역이자 국내유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만큼 국가해양정원 등으로 활용해야 함
- 어촌 전통 가옥단지와 어촌민속박물관, 어촌체험 및 생태관광 시설 등을 개발해 한국 어촌민속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해양라이프케어 복합단지 조성

- 태안군이 해양치유자원 발굴을 위한 연구협력 지자체로 선정된 가운데, 미래유망사업인 해양치유 관광산업은 향후 국민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태안군과 보령시를 잇는 해저터널과 해상교량 완공 이후 두 지역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보령해양헬스케어 산업 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종합 토론

- 종합토론 (좌장) 양창호 KMI 원장
안완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윤준상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학장
이재정 충남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센터장
이종원 충청투데이 충남본부 본부장
임영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문승국 태안남부수협 조합장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 토론자는 토론발표 순)

토론 1.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개발 필요」

안완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개발하여 해양주권 강화, 수산 자원 보호, 생태관광 거점으로 관리 필요

■ 서산 대산항, 다양한 인프라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 서산 대산항, 물동량 전국 6위 유류화물취급 3위 등 항만 물동량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인지도는 낮은 편임
- 물동량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추가 선석 건설, 국제 여객선터미널 구축, 대전 강릉 간 고속도로 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대산항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음

■ 해양영토 주권 강화, 수산자원 보호, 생태관광 연계 등을 위한 격렬비열도 관리 강화 필요

-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개발함으로써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방지 및 해양주권 강화 필요함
- 영해기점의 한곳으로 영토 주권 수호,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연안항 지정을 통해 접안 시설을 갖춰 해상방위 전진기지로 활용 필요함
- 격렬비열도와 육지 사이에 다양한 도서 지역이 존재, 팽이갈매기 번식지인 난도와 같이 무인도서와 생태 관광을 연계할 경우, 독도와외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 가능함
- 다양한 먹거리, 이야기 거리를 발굴하여 격렬비열도만의 독자적인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격렬비열도 종합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임
- 향후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련 정부 각 부처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함

토론 2. 「지역 간 협력 기반 세계적 김 클러스터 구축 필요」

윤준상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학장

충남 지역 기반 해양수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세계적 김 클러스터 구축, 휴양과 치유 기능을 가진 어촌 개발 등이 필요

■ 충남 지역 특성을 잘 살린 해양수산전략 개발 필요

- 타 지역에 비해 충청남도 지역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해양수산 특화 부분이 부족함
- 간척사업으로 갯벌이 감소하여 어패류, 해조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어민 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지리적으로는 수도권,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가까운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충남 특화형 연구사업 및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충남 지역 기반 해양수산관련 전문 연구인력 양성 필요

- 충남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많은 잠재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음
- 이를 위해 충남 지역 국립해양수산대학 창설 등 해양수산에 대한 교육 및 연구기관 설립 통한 해양수산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함

■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충남 지역 내 세계적 김 클러스터 구축 추진

- 충남 지역 최대 김 생산지는 서천지역이지만, 가공은 보령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생산-가공 및 이익 창출에 있어 지역 내 부조화 존재함
- 지역 간 연계를 통해 생산-가공-마케팅-체험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김 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어촌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어촌 개발 필요

- 단순한 어촌 체험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즐길 수 있는 휴양과 테라피 기능의 어촌 개발 필요함
- 어촌 4차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사업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토론 3. 「해양바이오 산업을 충남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재정 충남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센터장

해양바이오 소재 활용한 충남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 충남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는 바이오 소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사업 및 기업 지원 추진

- 신성장 동력산업의 한 분야로 바이오 소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GMP 시설 구축을 통해 어족자원의 잉여부분을 통한 사료개발, 기능성 화장품 개발, 기능성 식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기초지자체의 적극 참여와 협력을 통한 기업형 시스템 및 생산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또한 화장품, 의약품 등 제품화 개발과 더불어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인력양성을 통한 기초과학 연구기반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토론 4. 「연안지역 항만 배후 시설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해야」

이종원 충청투데이 충남본부 본부장

연안지역 항만 배후시설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해양수산 관련 R&D 기관의 충남 유치 및 고유한 지역 관광 상품 개발 필요

■ 연안지역 항만 배후시설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기존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지역 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유치에만 집중하였음. 그러나 지역 내 거점항만의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해 배후단지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봄
- 따라서 지역 내 항만 물동량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항만 배후지역을 확보,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해양수산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기관의 충남 유치 필요

-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부산권에 해양·수산 관련 연구 및 대학이 밀집해 있음
- 충남지역은 세계적 수준의 갯벌과 천혜의 해양수산자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인재를 육성할 기관과 인력이 부족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을 충남 지역에 유치 또는 충남 지역 기반의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이 필요함

■ 충남 고유의 해양수산, 생태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필요

- 충남은 지리적으로 대규모 관광객을 공급할 수 있는 중국과 가깝고, 국내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충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관광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양한 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
- 현재 해외 관광객의 국내 관광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서해안 철새, 갯벌 등 해양생태자원을 이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적 특색을 강조한 해양생태관광으로 관광객을 흡수할 필요가 있음

토론 5. 「육역·해양은 하나, 통합적 협력 강화해야」

임영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안 해역의 문제는 육역과의 통합적 관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연계와 통합의 핵심은 ‘사람’

■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협력의 중요성 증대

- 점차 항만과 관련해 도시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해양·연안·육지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관련 정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의 기능과 역할이 많은 부분에서 중첩되고 있음
- 정부 부처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연안과 항만 지역에서 국토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또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책적 고민을 함께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과 국토교통 분야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관할 주체, 범위 및 대상 등이 중첩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제도 수립에 있어 협업이 필수적임
- 앞으로 개최될 지역세미나에서는 관련 정부 부처 담당자들도 참석하여 지역의 고민들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희망함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적 활용 및 확대 추진 필요

- 현재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개발이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대형 항만을 중심으로 혜택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음.
- 충남 지역 항만 등을 포함해 동해항 등 타 지역 연안 중소 항만을 대상으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서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용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 해양산업클러스터가 기존의 물류시설로 사용됐던 유희항만시설을 대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연계·통합의 핵심은 ‘사람’, 전문인력 양성 필요

- 단절을 뛰어넘은 연계와 통합의 핵심은 결국 사람만큼 부처, 지역, 기관을 뛰어넘은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충남 지역 해양수산 연구 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에 힘써야 함

토론 6. 「해양수산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핵심」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충남 연안 지역경제 발전의 전제이며,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 해양수산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전제

- 해양수산 분야의 개발은 해양수산자원의 무한정한 공급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많은 해양수산자원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함
- 해양수산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지역민, 해양수산인,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로 해야 함
-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해양수산 관련업 종사자들이 해양을 보호하면서도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어촌계에서도 일회성 해양어촌 축제, 현재의 생산규모에 대한 만족 등에서 벗어나 20~30년 뒤에도 지속가능한 활동과 사업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함

■ 해양수산 지역 개발 정책 수립 방식의 전환 필요

- 신정부의 중요한 화두인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복잡다양해진 해양수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수직적 정책이 아니라, 지역별 계획에 근거해 국가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더불어 인구의 재편, 개발에서 보전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해양수산 이슈의 비경제성·탈지역성에 따른 개발방식의 전환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새만금의 경우 전북에 위치하고 있지만 용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북과 충남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하며, 항만배후도시 개발과 어촌관광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양연안 뿐 아니라 내륙이 포함되는 만큼 유관 부처 간 협력이 수반되어야 함

토론 7. 「살기 좋은 어촌, 수산 생산력 지속과 유통 선순환 구조 전제」

문승국 태안남부수협 조합장

1차 산업인 수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고민이 필요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는 수협의 역할 제고

■ 살기 좋은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과 지원이 필요

- 해양수산 자원의 이용과 개발을 통해 살아가는 수산인의 입장에서 자원의 보존만을 중요시하는 해양 정책은 때로 생소할 수 있음
- 일부 수산자원의 생산량 감소는 남획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개체의 감소, 산란시기 변화 등도 어업생산성 하락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
- 수산물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 수 있는 만큼 2·3·4차 산업 뿐 아니라 1차 산업인 생산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수협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해야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성립 가능

- 외국의 농수협동조합은 생산물을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바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등 제3기관에 납품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임
- 이는 조합의 시장 내 가격조절능력을 저하시켜 결국 생산자와 대형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하여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정부에서는 수협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함

토론 8. 「해양수산 전국포럼 통한 협업 플랫폼 통한 지역 해양수산 현안 해결 기대」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충남 지역 해양수산 현안, 유관 기관들 간 지속적 협력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 해양수산 전문 인력 확보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 유관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를 기반으로 대부분 지역 해양수산 현안의 해결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해양수산전국포럼 충남세미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및 지역연구원은 물론 언론인과 지방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충남 지역 해양수산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음
- 충남연구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오늘 논의된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차원의 자료 수집·제공에 적극 협조할 것임
- 특히 이를 위해 충남 지역의 해양수산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파견근무, 공동연구 등 지속적 교류를 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충남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음

■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연구 기획 및 수행 시스템 구축 필요

- 연구의 성격 및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중장기 정책을 위한 연구에 적용되는 연구 기획 및 수행 시스템을 지역의 소규모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1회성 과제 발굴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수요에 기반한 지역 정책 연구 수행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국책연구기관 및 지방연구원의 연구 과제 발굴 및 수행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시사점

‘해양수산 기반 지역경제발전’, 정책 수립·수행 방식의 전환 필요

■ 지역적 해양수산 특수성을 고려한 해양수산개발계획과 국가 계획 간 조화 필요

- 지역 해양수산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 리더십을 통해 도출된 지역 해양수산 계획과 국가 계획 간 조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사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함

■ 중앙·지방정부와 연구기관, 지역 산·학·연·정 간 공론의 장이자 해양수산인의 컨센서스 도출을 위한 협의의 장으로서의 ‘해양수산 전국포럼’의 역할 기대

- 해양수산 발전포럼은 지역발전위원회, 해양수산부, 12개 광역지자체 시도, 12개 시도 연구원, 26개 지역대학, KMI,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지역 협·단체장, 지역상공회의소, 언론사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해양수산인 협의체로 설립되었음
- 향후 ‘해양수산 전국포럼’은 전국 지역세미나 개최를 통해 지역 기반의 차별화, 특화된 해양수산 분야 지역정책을 발굴하고, 국가계획과의 조율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지역 특화 해양수산 R&D 전문 기관 및 인력 확보 시급

■ 지역이 가진 연안·해양수산 자원 잠재력을 잘 활용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수성과 장점이 반영된 정책 수립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의 해양수산 R&D 기반 및 인력 확보가 필요

- 충남의 경우, 357km²의 청정갯벌, 1,242km의 해안선, 268개의 섬 및 청정수산물, 전국 유일의 태안해안국립공원, 그리고 머드축제, 전어축제 등 천혜의 해양수산 자원 및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중장기적 계획 하에 사업화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기관과 인력이 부족함

- 국책연구소 및 지역연구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확대 등을 우선 추진하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의 충남 유치, 충남 지역 기반의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도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됨

‘환황해연계해역권’ 중심 지역으로의 기회와 강점 잘 활용해야

■ 환황해 연계 해양수산 신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중심 거점지역을 육성할 필요

-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격렬비열도를 잇는 섬 크루즈 벨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통한 생태기반 해양관광벨트, 태안군 안면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힐링벨트, 천수만 요트클러스터 등 충남 지역 특화 해양신사업을 추진하고, 거점지를 육성할 필요 있음

* 지난 10월, ‘해양치유자원 발굴을 위한 연구협력 지자체로 태안군 선정

■ 세계적 김 클러스터 조성 통한 ‘명품 김’ 산업화 추진

- 생산에서 수출, 마케팅 및 체험까지 가능한 ‘원스탑’ 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표적 어촌의 6차산업화 사례로 추진할 필요 있음
- 이 외 충남에서는 해삼산업 복합단지 조성, 서해안 말백합 생산어장 복원 등을 통해 수산의 미래 산업화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생태자본’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자원 확보 필요

■ 갯벌의 자원적 가치 인식 제고를 통한 ‘생태자본’ 확충

- 충남 서천갯벌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선정한 11개 핵심 철새서식지 중 하나이자,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8대 생태관광지 가운데 하나임
- 갯벌 복원과 보전을 통해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아가 생태관광으로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생태자본을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해야 함

■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해양수산 자원의 재생력(레질리언스)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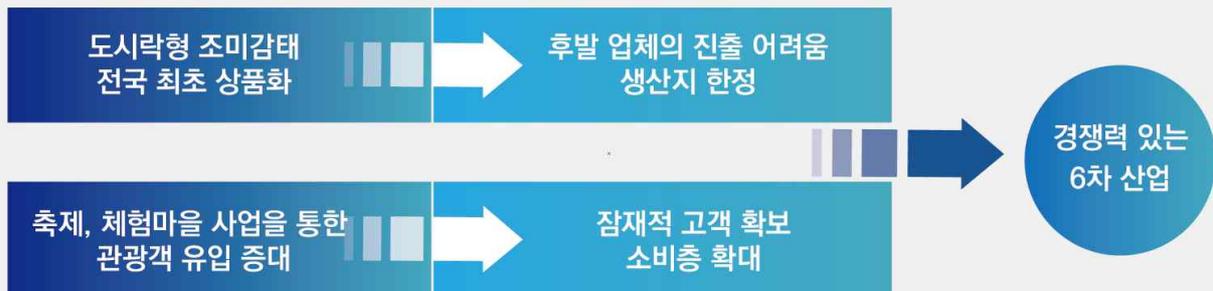
-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수산자원의 감소, 어업생산성 하락에 대비할 필요 있음

지역공동체 혁신성장 사례 : 충남 서산 중왕어촌계의 '어촌 6차산업화'

■ 전체 어가 120가구, 어업인구 160명, 연간 소득 4500만원

■ 중왕어촌계의 '6차 산업화' 노력

- 1)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한 어촌특구화발전위원회 설립(2014.4)
- 2) 가루감태 등 끊임없는 신상품 개발로 매출 확대
- 3) 감태로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어촌마을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잠재 고객 확보
- 4) 대형마트, 바다장터 등 입점을 통한 판로 다양화
- 5) 친환경 수산물 인증 획득으로 고객 신뢰 향상
- 6) 1사 1촌 등의 도농 교류를 통한 가공품 판로 확대
- 7) 귀어·귀촌을 통한 인력 창출로 어촌 조직화 및 경영화



■ 향후 계획)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춰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고, 젊은 인력을 적극 유치해 어촌 경영의 조직화·기업화 및 관광어촌화 추진 계획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TEU 이상 줄어들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자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현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방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자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알뜰물류,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구분	제목	발행일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 로보틱·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생물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가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URL : <http://www.kmi.re.kr/>